

Legislative measures for Goyang-si's policy  
ordinance following the launch of special citie

# 특례시 출범에 따른 고양시 정책조례 입법방안

김형성  
전성훈  
석호원

Legislative measures for Goyang City's policy ordinance following the launch of special city

## 특례시 출범에 따른 고양시 정책조례 입법방안

: 경기도, 특례시 등의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형성(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석호원(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재형(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민정선(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 행 일 2022년 12월 30일

저 자 김형성, 전성훈, 석호원

발 행 인 정원호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빔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 페이지 [www.goyang.re.kr](http://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91-6(933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요약 .....	i
<b>제1장 연구개요 .....</b>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5
<b>제2장 지방자치와 자치입법 및 입법 판단기준 도출 .....</b>	<b>7</b>
제1절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	9
제2절 입법 평가와 입법 절차 .....	14
제3절 조례 입법 기준 .....	28
<b>제3장 조례 비교 및 제·개정 필요성 검토 .....</b>	<b>31</b>
제1절 비교 대상 자치단체 대상 조례 비교 및 검토결과 .....	33
제2절 경기도 조례 비교 및 검토 결과 .....	73
<b>제4장 결론 .....</b>	<b>81</b>
제1절 연구 결과 .....	83
제2절 정책 제언 .....	84
<b>참고문헌 .....</b>	<b>89</b>
<b>Abstract .....</b>	<b>91</b>

## 표 목차

[표 2-1] 정부제출법안 입법절차 .....	17
[표 2-2] 의원 발의안 입법절차 .....	21
[표 2-3]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 차이 .....	22
[표 2-4] 정부제출법안 입법절차와 조례 입법 절차 비교 및 본 연구 내용과의 관계 .....	28
[표 2-5]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	29
[표 3-1] 비교대상 자치단체 조례 현황 .....	33
[표 3-2] 고양시와 수원시 비교결과_수원시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와 이에 판단결과 .....	36
[표 3-3] 고양시와 용인시 비교결과_용인시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와 이에 판단결과 .....	47
[표 3-4] 고양시와 성남시 비교결과_성남시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와 이에 판단결과 .....	59
[표 3-5] 경기도 조례 검토 결과 .....	73
[표 4-1] 경기도 조례 검토 결과 .....	83
[표 4-2] 「고양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84

## 그림 목차

[그림 2-1] 조례 입안 절차 .....	27
[그림 4-1] 입법평가 절차(안) .....	87



## 요 약

### 1. 연구 배경

#### □ 자치분권 2.0시대 본격 개막

- 2022년 1월 고양·수원·용인·창원의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출범
  - 특례시 이관사무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자치입법권 강화와 특례시 권한 확대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특례시를 포함한 타 지자체에는 제정된 조례이지만 고양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다수 발견

- 타 특례시와의 자치법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특례시에 걸 맞는 정책조례를 반영하는 등 선제적인 고양형 자치법규 토대 마련

### 2. 이론적 연구

#### □ 자치 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속한 사무에 대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조례제정권 및 규칙제정권
- 자치입법권의 한계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법률우위 원칙

## 1.

### □ 입법평가

- 입법과정에서 입법안의 효과와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
  -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타 특례시, 대도시, 경기도 조례 검토 결과

### □ 수원, 용인, 성남, 경기도 조례 검토 결과

- 2개 이상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다음과 같음
  - 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②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 ③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 ④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 ⑤ 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 4. 정책 제언

### □ 고양시 입법평가 조례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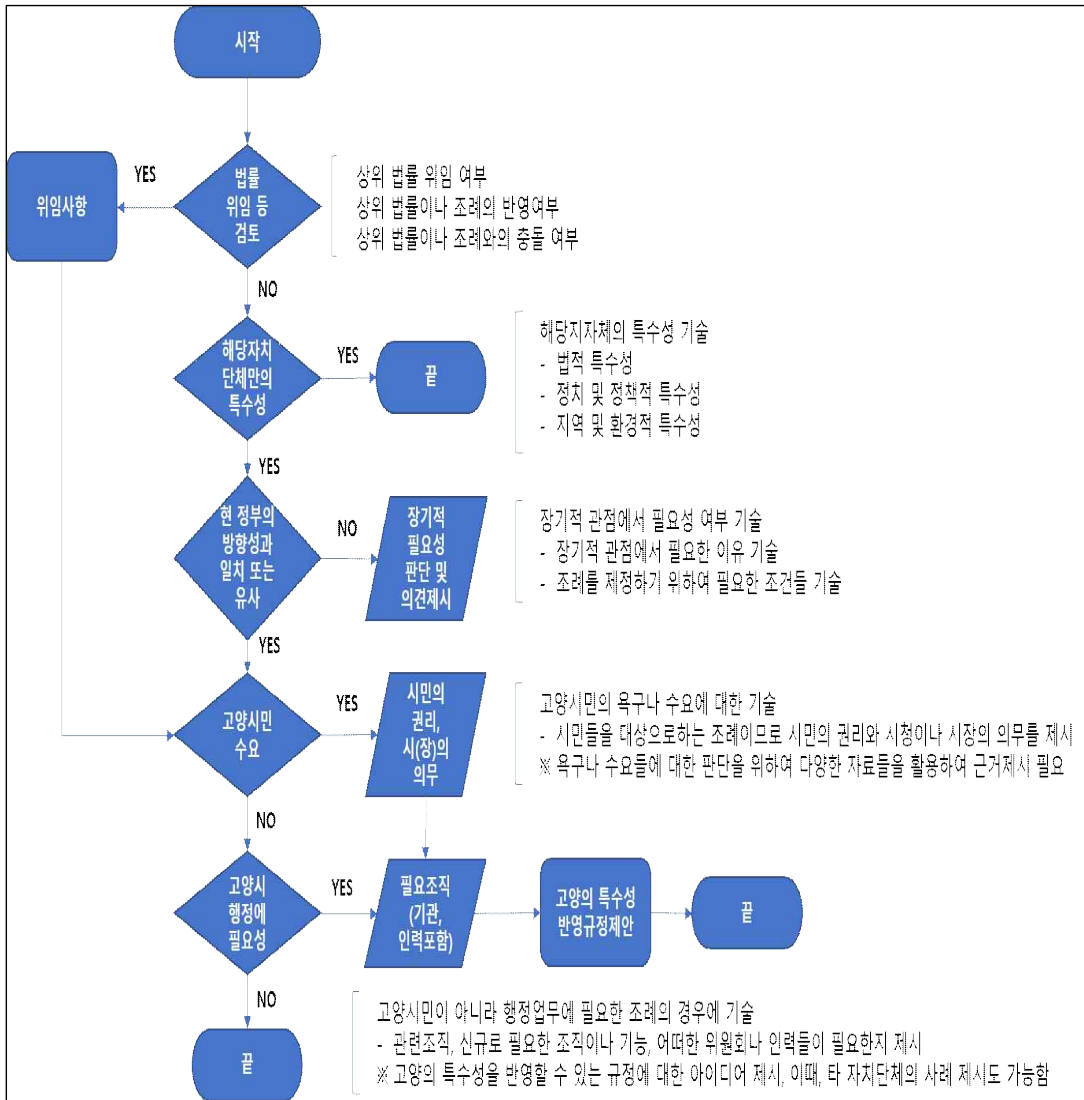
- 수원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향후 고양시 조례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입법평가 절차 및 평가 내용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입법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입법평가 절차(안)>





#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며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특히, 2022년 1월에는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고양특례시’가 출범하였고, 특례시 지정에 따라 대도시 수준의 권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례시 지정과 별도로 최근 정부에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는 등 향후 특례시 이관사무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고양 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의 소관 사무도 확대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특례시 권한 확대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특례시를 포함한 타 지자체에는 제정된 조례이지만 고양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타 특례시와의 자치법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특례시에 걸 맞는 정책조례를 반영하는 등 선제적인 고양형 자치법규 토대 마련과 구축이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4가지로 첫째, 타 특례시 자치법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고양특례시와 타특례시, 성남시 간 분야별 조례를 분석하여 고양특례시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 도출하였다.

둘째, 고양특례시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들의 제정 필요성을 위하여 법제화 타

당성 및 법제화 방안 모색하였다.

셋째, 경기도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타 특례시 자치법규 비교분석 결과 및 경기도 조례 검토를 통하여 특례시에 걸맞는 고양형 정책조례 제언하였다.

## 제2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1. 연구내용

첫째, 지방자치 법령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 조례제정의 한계 등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타 특례시 및 경기도 등의 조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야별·분석기준을 도출하고, 고양특례시에서 제정되지 못한 조례를 분야별로 도출하였다.

셋째, 분야별로 제정되지 못한 조례들에 대하여 고양특례시 조례 입법 타당성을 모색하였다.

넷째, 고양특례시의 입법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범위

먼저 시간적 범위는 2022년 현행 제·개정되어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대상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조례 중 고양특례시청 각 부서의 수요 조례를 분석한다.

###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 주를 이룬다.

첫째,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치법규 매칭분석(Matching Analysis)로 ① 자치법규정보시스템<sup>1)</sup>내 고양특

례시 소관업무별 분류에 따라 수원·용인·창원 특례시 및 성남시 조례를 분석하여 매칭하였다. ② 소관업무별로 매칭된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에는 제정되어 있으나, 고양특례시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미흡조례를 이론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입법 여부 판단하였다.

법률의 위임여부→단체위임 or 기관위임 여부 → 강행규정 or 임의규정 → 고양특례시의 수요의 시급성, 중요성, 특수성(공약, 시민 수요) 순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고양시 법제화 판단을 제시하였다.

---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제 2 장 지방자치와 자치입법 및 입법 판단기준 도출

제1절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제2절 입법 평가와 입법 절차

제3절 조례 입법 판단기준 도출



## 제절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태영, 2017).

지방자치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며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전한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통상 전자를 ‘주민자치’, 후자를 ‘단체자치’로 분류하며, 이 두 가지 형태를 합하여 지방자치라고 칭한다.

영·미형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자치권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구성한 지방정부와 주민들 자신과의 관계를 말한다. 결국, 자치권은 지역주민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륙형 단체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방의 정치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지방자치권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논의된다. 결국, 자치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며, 이는 제한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한 쪽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사실이 문화를 형성하고 동시에 정치·행정 문화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

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유럽의 전통을 이어 단체자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행정자치부, 2015).

##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권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치권은 자치입법권이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논의한다.

### ① 자치입법권의 개념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한 사무에 대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자치입법권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자치입법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조례제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규정이다.

둘째, 규칙제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규정을 말한다.

## ② 자치입법권의 근거

자치조직권은 「헌법」, 「지방자치법」<sup>1)</sup>, 동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헌법」 제111조 제1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조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합리적·기능적 권한배분을 통하여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적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 또는 운영원리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역동적 측면에 주목하여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왔는데,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 등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박윤훈, 2001: 97-103; 이상훈, 2009: 69-70.에서 재인용). 다시말하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권, 재산관리는 자치재정권,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은 자치입법권의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다. 「지방자치법」 제3장은 ‘조례와 규칙’으로 조례·규칙,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 ③ 자치입법권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은 다음의 이유에서 사법적 통제를 받게된다(이상

1)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있다.

훈, 2009).

첫째, 법의 일관성 유지 때문이다. 조례는 법률과 함께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규의 일종이다. 따라서 만약 조례가 법률과 모순되거나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율을 설정하는 경우, 법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둘째, 기본권 보장 때문이다. 조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치주의 실현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행위가 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행사도 법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안효섭(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주민에 근접한 자가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규정을 제정한다는 근거리 행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하여 국가가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각 지방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도 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법체계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의미하는 범위의 한계의 문제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이자 한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법치행정의 원리에 있어서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 하며,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법률우위의 원칙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법률은 모든 국가의사에 대하여 우월하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 행정작용은 무효이다. 다음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이 적용하는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sup>2)</sup>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다.<sup>3)</sup>

2) 첫째, 침해유보설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 시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둘째, 전부유보설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셋째, 중요사항유보설로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3) <https://esylaw.com/602>

위와 같이 법 체계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거의 없어져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위상과 그 실질적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는 문제가 있다. 다행히 관례와 학설은 조례제정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법률과 조례가 같은 목적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범위를 인정하는 상황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넷째, 법령과 조례의 관계 규정인 「헌법」 제111조 제1항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법적 통제 규정이다. 반면, 긍정적으로 볼 때, 자신의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사항유보설로 위에 제시하였다.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3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부합한다.

## 제2절 입법 평가와 입법 절차

### 1. 입법 평가

#### 1) 입법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입법평가란? 입법과정에서 입법안의 효과와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입법평가는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인석, 2017).

입법평가의 대상은 국회에서 심의되는 모든 입법안이며, 입법평가의 방법은 입법 영향분석, 입법 필요성 검토, 입법 후 평가 등이 있습니다. 입법평가의 주체는 입법부처, 입법예고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며, 입법평가의 결과는 입법영향분석서, 입법필요성 검토서, 입법후평가보고서 등으로 작성됩니다.

이러한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최윤철, 2009).

첫째, 질적으로 향상된 법률의 획득이다. 입법평가의 가장 큰 효과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입법평가의 목적이기도 하다. 입법동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과정은 법률의 제정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잉입법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주고, 수범자의 요구에 맞는 법률안 초안을 도출하게 된다. 병행평가단계에서는 법률초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후평가는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점 발견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법률의 폐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등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입법평가를 통하여 얻는 효과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보다 적은 법률의 제정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평가과정의 진행은 법률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여져 반드시 필요한 법률의 제정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입법평가의 모토 중의



하나가 ‘보다 적은 법률, 보다 높은 효율’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과정의 합리화이다. 입법평가는 통상적인 입법절차 속에서 수행될 수 있다. 입법을 준비하는 자가 입법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법률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해당 법률안의 장래의 수범자 집단에 대한 의견청취(입법예고,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법률안의 경제적 효율성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과학적 기법이 사용되며, 이러한 기법들은 입법과정의 객관성과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탈관료주의 및 행정의 효율화이다. 현대 국가는 행정권의 확대에 따른 보다 많은 법률수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법률의 제정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법치행정 또는 법치국가라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더욱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진다. 또 그러한 한에서 행정권의 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복잡다기한 행정’,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로써 법률’이라는 말은 ‘많은 법률’과 비례하는 ‘행정권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관료주의화 및 규모의 비대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화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은 법률 및 법률정비를 통한 행정에서의 탈관료주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들 국가는 불가피한 법률만의 제정(최소한의 법률)을 통하여 행정권의 집행부문의 최소화를 꾀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규범력이 떨어진 법률들의 정비를 통하여 해당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던 행정영역의 축소를 통하여 행정의 경량화 및 효율화를 꾀한다.

## 2) 입법평가의 모듈

입법평가의 모듈은 사전적 입법평가, 입법과 동시에 진행되는 병행 입법평가, 입법 후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사후 입법평가 3개의 모듈이 있다(Y. Choi, Die Pflicht des Gesetzgebers zur Beseitigung von Gesetzesmngeln, Hamburg 2002, S. 65 ff.;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제21집, 465; 최윤철, 2009에서 재인용).

### (1)사전 입법평가(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pGFA)

‘사전 입법분석 방법’(die Art prälegislativer Analytik)이라고도 불리는 사전 평가는 법률의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불가피성(Notwendigkeit)이 더 검토되어야 하거나, 만약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법 형식이 어떠한 사고의 방향(‘Denk’ richtung)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병행 입법평가(beglei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GFA)

병행평가는 대부분 해당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법률 초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수행된다. 입법자의 병행평가는 법률 초안이 실제 법률로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을 가상하고, 해당 법률의 집행가능성(Vollzugspraktikabilität), 준수가능성(Befolgbarkeit), 이해의 용이성(Verständlichkeit), 비용과 편익의 관계(Kosten-Nutzen-Relationen), 제도적 기능성(institutionelle Funktionalität)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법률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 (3)사후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rGFA)

사후 평가(ex-post Evaluierung)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실제로 최초의 입법자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개정, 폐지 또는 대체법률의 마련 등을 위해서 수행된다.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입법자의 법률의 관찰의무(die Beobachtungspflicht)와 관련성이 깊다고 하겠다.

## 2) 입법평가의 방법 및 절차

입법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일석, 2017).

첫 번째, 문제확인으로 입법이 필요한 문제를 확인한다.

두 번째, 목표설정으로 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세 번째, 대안개발로 입법 안을 개발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네 번째, 각 대안의 비교평가: 제시된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다섯 번째, 모니터링으로 입법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한다.

다음으로 입법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일석, 2017).

첫째, 효과성이다. 입법안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둘째, 효율성이다. 입법안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경제성이다. 입법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그 밖에 법령입안 기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헌법적합성으로 입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는 입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구조와 기능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법체계 정합성으로 입법안이 기존의 법률 체계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입법안이 기존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지를 검토한다.

## 2. 법률의 입법과정

### 1) 정부제출법안 입법절차

정부제출법안 입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표 2-1] 정부제출법안 입법절차

입법과정	내용	소요기간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법령안 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입법과정	내용	소요기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함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사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함	
법령안의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함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약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는 과정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있음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있음	약 15 ~ 30일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약 40 ~ 60일

입법과정	내용	소요기간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 )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음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 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함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장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됨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됨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침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함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	약 7 ~ 10일

입법과정	내용	소요기간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도 함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됩니다.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뒤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함	약 5일
공포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됨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됨	약 3 ~ 4일

<출처> 법제처 법제업무정보(<https://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 2) 의원입법법안 입법절차

의원입법법안 입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표 2-2] 의원 발의안 입법절차

입법과정	내용
법률안 발의(제출)	법률안 국회에 제출,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
본회의 보고	제출된 법률안 본회의에 보고
소관위원회 회부	법률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
입법예고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을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본회의 심의	본회의에서 법률안 심의
정부이송	본회의에서 심의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
공포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공포

## 2. 조례 입법

### 1)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sup>5)</sup>

#### (1) 소관사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와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인 자치사무, ②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sup>5)</sup> 법제처(2018),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 ③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2-3]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 차이

구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자치법규 형식	조례	조례	규칙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 국가의 장려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 위임기관의 부담금	전액 위임기관 부담
사무처리 기준	법령에서 구속	법령과 위임자 지시에 구속	법령과 위임자 지시에 구속
지방의회 관여	허용	허용	원칙적 불허
국가의 감독	위법성 감독	위법성 감독 + 합목적성 감독	위법성 감독 + 합목적성 감독
감독처분			시정, 취소, 정지 및 이행명령, 대집행 등
감독처분 제소	가능	불가능	원칙적 불가능

### ① 자치사무 여부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사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여기의 ‘자치사무’는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재산의 관리’이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단체위임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자치사무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위의 사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자치사무이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국가사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무도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일 수 있고, 반대로 여기에 포함된 사무도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이 필요하다.

법령상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별 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 사무의 성질과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주체 등까지 고려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법에서 직접 위임한 법정위임사무)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 특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크므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라는 이유로 해당 사무를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본 경우도 있다.

법령에서 특정사무를 국가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만약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위법·무효가 된다. 국가사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조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에서 특정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기관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사무는 국가사무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해당 사무에 관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거나 ‘조

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가 국가사무나 자치사무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㉔ 법령에서 사무 수행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을 사무 수행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또는 단체위임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

법령에서 동일한 성질의 사무를 업종별·규모별로 일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정하면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무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규율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규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위임한 바 없이 관련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④ 교육감의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행정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이고, 집행기관으로는 교육감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학생의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2) 기타원칙<sup>6)</sup>

첫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령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권한(인사에 관한 권한, 예산편성·집행권, 행정기구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지방의회의 발의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조례입법 절차<sup>7)</sup>

조례안의 입법절차는 크게 1)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2) 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3) 조례안의 공포 및 효력발생,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sup>6)</sup> 법제처(2018),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sup>7)</sup> 행정안전부(2022),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2년판)」.

규칙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발의할 수 있다는 점과 달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으며, 주민이 청구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발의할 수도 있다.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첫 번째 단계인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절차가 달라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그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 입법 계획(입법방침)수립→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입법 예고→주민 의견 수렴→법제심사→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심사한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의원의 조례안 발의→소관 위원회 회부심사→본회의 심의·의결→집행부로 이송→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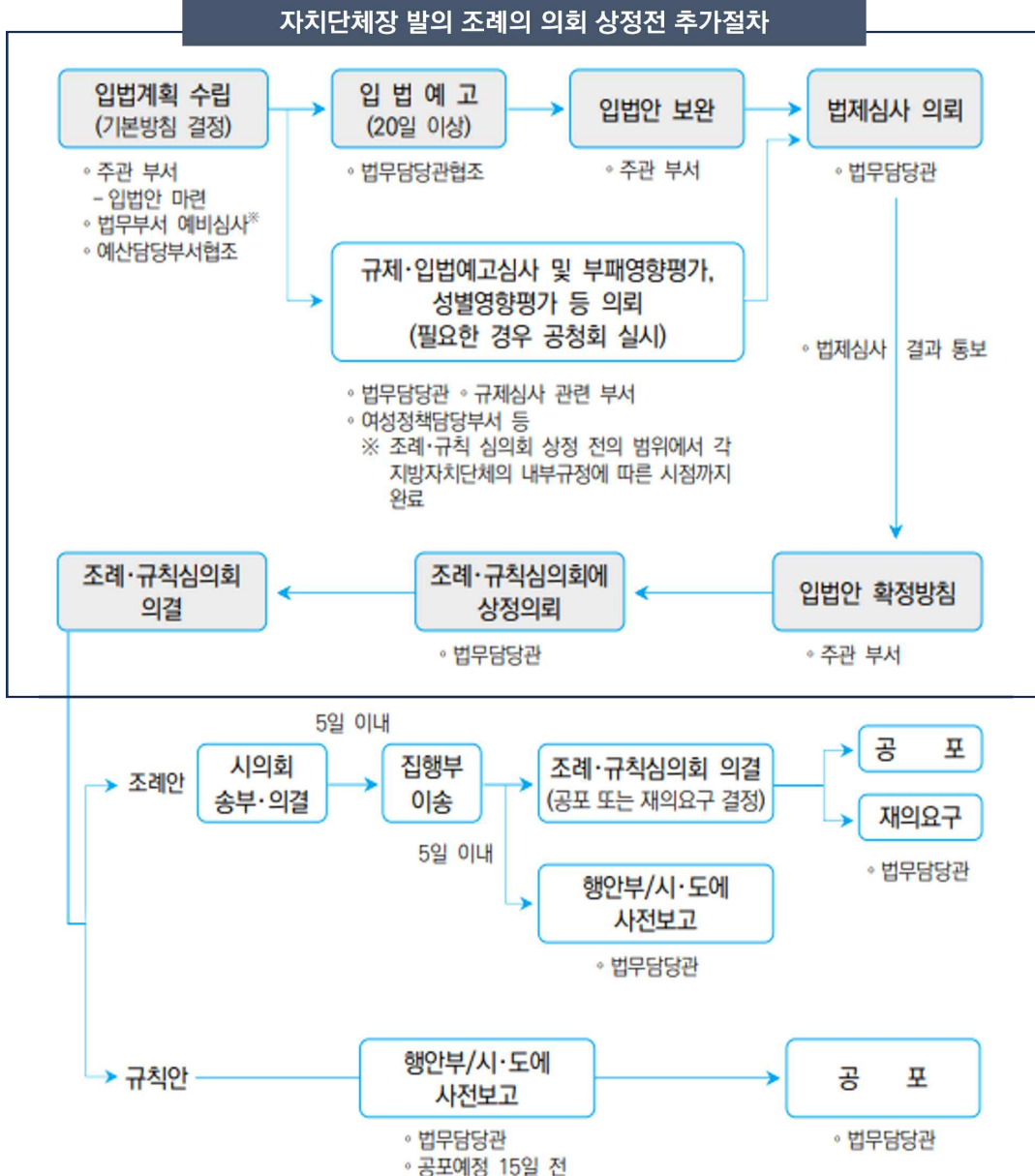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 청구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발의 조례안 발의<sup>9)</sup>→의회 소관 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의결→집행부로 이송→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포 전에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보고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조례안의 위법성 등을 검토하여 재의요구 지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사전보고 절차를 거친 결과 재의요구나 재의요구 지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조례안은 공포되어 조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 입법 절차는 다음그림과 같다.

8) 이는 자치입법권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림 2-1] 조례 입안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2022).「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2년판)」, p12 참조 수정.

※ 자치법규 제정절차 흐름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른 법제업무 절차에 따라나, 지방자치단체별 법제심사의 순서 및 횟수, 입법안 확정방침의 결재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제3절 조례 입법 기준

## 1. 조례 입법 절차와 본연구의 관계

본 연구는 입법계획 수립과 관계부서 협의를 위한 사전조사 형식으로 타 특례시 사례를 조사하여 고양시에 결여된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다.

[표 2-4] 정부제출법안 입법절차와 조례 입법 절차 비교 및 본 연구 내용과의 관계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절차	자치단체장 제출 조례 입법절차	본 연구 내용의 관련절차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 수립	본 연구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고양시에 결여된 조례를 찾고,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위임사 무인지 등을 검토하여 입법필요성을 제시한 연구
법령안의 입안	주관부서 입법안 마련	
	법무부서 예비심사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기관협의(예산담당부서 협조)	
사전 영향평가	규제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안 보완(주관부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차관회의 심의	입법안 확정방침(주관부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상창의결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 부이송	시의회 송부의결 집행부 이송(5일 이내) 행안부/사도에 사전보고(법무담당관)	
국무회의 상정		
공포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 조례 입법 필요성 검토 기준

검토 기준은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의 ①, ② 단계의 판단이다.

[표 2-5]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순서	체크리스트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없다 / 불필요	있다 / 필요
②	상위법령/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지?	
	없다 / 자치법규재정 검토	있다 / 자치법규 개정 검토
③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무는? (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인가 제12조에 따른 사무인가?)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규칙제정개정검토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 제정개정 검토
④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는가?	
	없다	있다 / 상위법령 위반 여부 검토
⑤	제정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님의 권리의무와 관련있는지?	
	없다	있다 /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⑥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의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지? <sup>10)</sup>	
	없다.	있다.
⑦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공포일 시행	있다 / 시행유예 검토
⑧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없다	있다 / 경과조치·적용례 검토
⑨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	있다 / 적용례 검토
⑩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있다 /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개정 검토
⑪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sup>11)</sup>	
⑫	재개정문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출처> 법제처(2018).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430-433.

- 
- 10)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사권 등)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지방의회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예 : 지방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11) • 상위법령의 규정순서를 따르고 있는지/일반적인 법령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조문은 맞는지?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 제 3 장

# 조례 비교 및 제·개정 필요성 검토

제1절 비교 대상 자치단체 대상 조례  
비교 및 검토결과

제2절 경기도 조례 비교 및 검토 결과



## 제절 비교 대상 자치단체 대상 조례 비교 및 검토결과

### 1. 비교대상 자치단체 조례 현황

본 연구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각 비교대상 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분야와 개수는 다음과 같은데, 조례의 개수는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순이다.

[표 3-1] 비교대상 자치단체 조례 현황

고양시 조례		수원시 조례		용인		성남	
분야	개수	분야	개수	분야	개수	분야	개수
제1편 의회	23	제1편 의회	23	제1편 의회	23	제1편 의회사무국	25
제2편 평화미래정책	12	제2편 시민소통 기획관	2	제2편 시민소통	2	제2편 아시아문화도시담당관	7
제3편 감사	7	제3편 인권담당관	1	제3편 감사	6	제3편 공보관	2
제4편 언론홍보	5	제4편 감사	5	제4편 공보	4	제4편 감사관	6
제5편 청년	4	제5편 언론담당관	2	제5편 정책기획	14	제10편 재난안전관	14
제6편 기획조정	45	제6편 홍보기획관	4	제6편 법무	9	제6편 행정기획 조정실	101
제7편 자치행정	61	제7편 청년정책관	4	제7편 청년	3	제7편 복지국	88
제8편 일자리경제	46	제8편 기획조정	98	제8편 자치행정	47	제8편 재정경제국	70
제9편 복지여성	97	제9편 경제정책	60	제9편 재정	29	제9편 교육문화 체육국	52
제10편 기후환경	39	제10편 복지여성	69	제10편 교육문화	45	제10편 환경보건국	43

고양시 조례		수원시 조례		용인		성남	
분야	개수	분야	개수	분야	개수	분야	개수
제11편 교육문화	43	제11편 문화체육 교육	58	제11편 복지여성	65	제11편 도시주택국	30
제12편 신청사건립	2	제12편 도시 디자인단	10	제12편 일자리 산업	50	제12편 교통도로국	40
제13편 녹색도시	5	제13편 도시정책	27	제13편 시민안전	23	제13편 보건소	26
제14편 도시교통 정책	35	제14편 환경	57	제14편 도시기획	6	제14편 농업기술 센터	2
제15편 시민안전 주택	51	제15편 안전교통	65	제15편 도시정책	15	제15편 푸른도시 사업소	13
제16편 도시균형 개발	7	제16편 도시개발	10	제16편 주택	7	제16편 맑은물관리사업소	12
제17편 보건소	21	제17편 공항협력	1	제17편 교통건설	35	제17편 문화도시 사업단	7
제18편 농업기술 센터	25	제18편 직속기관	45	제18편 미래산업추진	1	제18편 도서관 사업소	2
제19편 푸른도시 사업소	17	제19편 사업소	27	제19편 직속기관	34	제20편 장례문화 사업소	2
제20편 도서관센터	4	제20편 구, 동	3	제20편 사업소	59		
제21편 상하수도 사업소	10						
제22편 도로관리 사업소	7						
전체	566	전체	571	전체	477	전체	542

각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법적근거를 살펴본다. 법적근거는 4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해당 규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해야한다’라고 강행규정 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해당 규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셋째, 해당 규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해야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해당 규정의 목적과 관련 없는 경우나, 자치사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위 규정의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고양시가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경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둘째, 근거규정이 없으나, 정부정책이나 고양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필요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근거규정이 없으나, 정부정책이나 고양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충분한 경우, ‘조례 제정 검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 부여가 불분명한 경우, ‘불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다섯째, 위 4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 ‘불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 2. 고양시와 수원시 간 비교

고양시와 수원시 간 조례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와 다르게 수원시에만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189개로 도출되었는데, 이중 수원을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13개 조례로 도출되었으며,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19개 조례로 검토되었다.

[표 3-2] 고양시와 수원시 비교결과\_수원시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와 이에 판단결과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의회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의회 의결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 관리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	불필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수원시의회의 수원시민에 대한 서비스 장전 선언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전문지원인력의 직무범위 설정 필요
시민소통 기획관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공공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조례 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불필요
언론담당관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정책기획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 필요 - 고양시의 경우, 예산성과급 관련 규정 만 존재함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협치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조례 필요
예산재정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9조제3항에서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제상황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필요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	불필요
행정지원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대한민국국기법」	불필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임의규정 「지방공무원법」제77조	불필요: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내용 반영됨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영유아보육법」제14조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자치분권	수원시 방법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임의규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불필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됨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제4조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경기북부 경제공동체 추진 중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	조례 개정 검토 필요: 「고양시 시민헌장 조례」가 있으나 내용이 미흡함
	수원시 자유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불필요
법무담당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선언적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필요: 비교자치단체 모두 규정하고 있음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필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음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필요
	수원시 의정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필요: 조례 입법의 타당성 강화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불필요
시민봉사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불필요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선언적 규정: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정이 필요함
정보통신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	불필요
일자리정책	수원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여성경제활	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동법 제3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지역경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	불필요: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특산물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	불필요: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
기업지원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	불필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회계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필요: 조례 입법의 타당성 강화
재산관리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노동정책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 기본법」	불필요
복지정책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선언적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불필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재해주택 복구사업 용자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복지협력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여성정책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강행규정: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입양특례법」	필요: 「고양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내에 입양과 관련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개정 필요
노인복지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임의규정: 「노인장기요 양보호법」제3 7조의3제2항	불필요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선언적 규정: 「노인복지법」 제4조	불필요
보육아동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관련서비스가 드림스타트 일 필요는 없음
	수원시 보육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필요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다문화정책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문화예술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문화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예술인	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복지법]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관광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강행규정: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의거 장애인 여행기회 확대, 관광활동 장려지원 시책 필요
교육청소년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강행규정: 「교육기본법」 제28조	불필요: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으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음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강행규정: 「청소년 기본법」	불필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사업은 필요하나 청소년 기본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불필요
체육진흥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도시디자인단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	불필요
도시계획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공동주택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스마트도시	수원시 유엔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건축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	불필요
환경정책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강행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 검토 필요: 법적근거는 국가와 사도의 책임임.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는 없으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범위내에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로는 한계가 있어, 생물다양성 보호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임의규정: 「환경보건법」 제20조	불필요
기후에너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시책에 적극적 협력의무,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수립시행, 교육홍보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선택사항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청소자원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필요: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음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위생정책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불필요
하수관리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질환경	수원시 광고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재이용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수원시 수질개선폰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임의규정: 「온천법」 제20조	불필요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통합적 물관리 필요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임의규정: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불필요
시민안전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이지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님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민방위기본법」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법, 제18조제2항	
교통정책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정 검토 필요: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전·사후 점검 규정 필요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불필요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건설정책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사도지사에게 위임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	필요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 제6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개정 검토 필요: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으로 허가 관련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개정 필요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별표2제4호	필요
	수원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제61조 및 제91조	필요
도시교통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대중교통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임의규장: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불필요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불필요
도시개발	수원시 관산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임의규장: 「도시개발법」 제11조	불필요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임의규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불필요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임의규장: 「도시개발법」 제11조	불필요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불필요
도시재생	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보건소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불필요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국민건강증 진법」제9조 제2항	불필요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장기등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	불필요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선언적 규정: 「한의약 육성법」 제3조	불필요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농업기술센터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임의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불필요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유용미생물은 축산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됨. 고양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데 있어 조례 제정 필요
제2장 공항지원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	불필요
제1장 화성사업소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제3장 박물관사업소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임의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고양시도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임
제7장 공원녹지 사업소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제8장 도로교통관리 사업소			강화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불필요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불필요

### 3. 고양시와 용인시 비교

고양시와 용인시 간 조례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와 다르게 용인시에만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133개로 도출되었는데, 이중 용인을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10개 조례로 도출되었으며,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14개 조례로 검토되었다.

[표 3-3] 고양시와 용인시 비교결과\_용인시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와 이에 판단결과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의회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불필요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의회 의결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 관리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전문지원인력의 직무범위 설정 필요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	불필요
시민소통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공공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되며 이에 따른 예방적 갈등 관리를 위하여 조례 필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불필요
공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정책기획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지역마다 지역학을 육성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법무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	선언적 규정 「지방자치법」 제7조제항	불필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공무원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대한민국국법」	불필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이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치행정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고양시 기록관 운영 규칙」이 존재하며,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의 의무는 있으나, 민간기록에 대한 규정은 없음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비교대상 모든 자치단체에서 직장내 어린이집 추진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선언적 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필요: 비교자치단체 모두 규정하고 있음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임의규정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강행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필요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선안적 규정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주민등록법」 제1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정이 필요함
재정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강행규정 지방재정법 제72조의2	필요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	불필요
교육문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안적 규정 교육기본법 제4조	불필요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61조	불필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문화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고양시도 박물관 건립이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진흥법 제2조제2호	필요한 실정임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산안적 규정「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의2」	불필요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정「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	불필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안적 규정「국민 체육진흥법 제10조	불필요
복지여성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안적 규정「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필요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산안적 규정「국가 보훈 기본법」제6 조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불필요
	용인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강행규정「 의료급여법 」제6조	필요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장애인 안노안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불필요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선언적 규정「노인 복지법」 제4조 및 제8조	불필요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제13조	불필요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선언적 규정 「장애인복지 법」제18조 및 「장애인동복 지원법」제6조	불필요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장애인안노안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불필요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선언적 규정「장애인 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물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불필요 : 「고양시 아동학 대 예방 및 방지 조례」,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행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불필요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일자리산업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여성경제활동 법」제3조	필요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산안적 규정「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불필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료 징수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2항	불필요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안적 규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불필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불필요
시민안전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산안적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3항 임의규정 '자율방범활동 기본법' 제4조	불필요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됨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 5항	불필요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임의규정 '자연재해대 책법' 제9조	불필요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자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민방위기본 법' 제8조 제2항	불필요
도시기획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불필요
도시정책	용인시 성북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자연추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법 제11 조제1항	필요
교통건설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임의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불필요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강행규정 교통안전법 제3조	필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관한 조례에는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전사후 점검 규정 필요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조의2	불필요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임의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불필요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여객자동차 차고 설치 조례	-	불필요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의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불필요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임의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불필요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 제61조 및 제61조의2	필요
미래산업 추진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직속기관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유용 미생물은 축산 및 농업의 생 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 는데 활용됨. 고양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확대 하는데 있어 조례 제정 필요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암양규정 모자보건법 제5조의7 및 「지방자치법」 제44조	불필요
	용인시 모유수유 자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저출 산 고령화 대책으로 모유수 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지 원 필요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강행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	필요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강행규정 「농어촌 등 보건진료소 를 위한 특별자치법 제21조	불필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 한정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체조직관 련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선언적 규정 「한의약 육성법」 제3조	불필요
사업소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
	용인시 수질개선평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강행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불필요: 환경부의 기능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불필요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강행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 검토 필요: 법적근거는 국가와 사도의 책무임.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는 없으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범위내에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고양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로는 한계가 있어, 생물다양성 보호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	불필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암의규정 폐기물처리 설 설치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조례 제정 검토 필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불필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강행규정 「수도법」제 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필요

## 4. 고양시와 성남시 간 비교

고양시와 성남시 간 조례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와 다르게 용인시에만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187개로 도출되었는데, 이중 성남을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6개 조례로 도출되었으며,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11개 조례로 검토되었다.

[표 3-4] 고양시와 성남시 비교결과\_성남시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와 이에 판단결과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제개정 필요성
의회사무국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의회 의결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 관리
	성남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전문지원인력의 직무범위 설정 필요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불필요
아시아실리 콘밸리담당 관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규제자유특 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조	불필요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고양시 바이오 특구 산업과 연계해서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불필요: 「고양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유사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재난안전관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임의규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 조	불필요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불필요
행정기획 조정실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대한 민국국기법	불필요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성과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 필요 - 고양시의 경우, 예산성과금 관련 규정 만 존재함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음
	성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지방공무원 법 제2조 제4 항	불필요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공공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조례 필요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강행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강행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원규정 「자율방범활동 등에 관한법제 4조	불필요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됨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교육기본법 제28조	불필요: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으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음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산안적 규정「청년 고용촉진특별 법 제8조2	조례 제정 검토 필요: 이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남시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	강행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불필요: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행정절차법 」	불필요: 일반적인 절차에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성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산안적 규정「주민 등록법 제2 조제4항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주민등록법」 제1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정이 필요함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강행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필요
복지국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관계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암의규정 「장애인노안 임상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불필요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선언적규정 「노인복지법」 「자살예방 및 사회기초법」	불필요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언적 규정 「치매관리법」	불필요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조	불필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선언적 규정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	불필요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임의규정 「노인장기요양법」제6조	불필요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장애인노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안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	불필요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아동수당법」 제10조제2 항 「사회보장기 본법」제2조,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	불필요: 아동수당 지급은 강행규정이거나,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재정경제국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강행규정 「입양촉진법」	불필요: 입양을 지원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거나,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불필요
	사용허가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선언적 규정「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불필요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	불필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행규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필요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안적 규장「유통 산업발전법」 제86조	불필요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장「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무원 해외 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교육문화체 육국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안적 규장「청소 년 기본법」	불필요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규정 「청소년 보호법」제3 조	불필요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문화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예술인 복지법」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임의규정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불필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임의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관계규제 등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산안적 규정「국민 체육진흥법」 제6조	불필요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정「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의2	불필요
환경보건국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강행규정 「자연환경보 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 검토 필요: 법적근거는 국가와 사도의 책임임.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는 없으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범위내에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로는 한계가 있어, 생물다양성 보호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임의규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불필요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폐기물 관리법」	불필요 - 다만,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등으로 징수할 수 있음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임의규정 「폐기물관리 법」제4조 제항	불필요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임의규정 「지방재정법」 제7조	불필요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보건의료기 본법」제4조,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 진법」제3조 및 제6조	불필요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산인적 규정「아동 복지법」제4 조	불필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주택국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자연추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불필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의규정 「주택법 제59조」	불필요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임의규정 「지방공기업 법 제5조」	불필요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임의규정 「지방공기업 법」	불필요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주택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	선안적 규정「건축 기본법」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 위한 기본 조례 필요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선안적 규정「건축 물관리법」	조례 제정 검토 필요: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조례 필요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임의규정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 「지방자치법 제61조」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교통도로국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교통안전법」 제3조	필요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제4호	필요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산안적 규정 「교통안전법」 제8조 제2항	불필요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주차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지방자치법」 제59조	불필요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불필요 : 택시정책심의위원회 등은 국토교통부 및 사도의 가능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불필요
	성남시 교통통신문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강행규정 「도로법」 제61조 및 제61조	필요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불필요
보건소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산안적 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관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불필요
	성남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산연적 규정 「한의약육성법」 제3조	불필요
푸른도시 사업소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의규정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불필요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	불필요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불필요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임의규정 「물환경보전법」 제6조	불필요



세부업무	조례명	법적 근거	조례 재개정 필요성
맑은물관리 사업소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산안적 규정「물관 리기본법」제 5조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물관리의 기본 조례 필요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	불필요
문화도시사 업단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임의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26조	불필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의규정 「국채법」 제4조 「지방채법」 제5조	불필요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불필요
장례문화사 업소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불필요



## 제2절 경기도 조례 비교 및 검토 결과

현재 경기도 조례는 1023개이다. 이중 고양시에 동일·유사한 조례가 없어 제정이 필요한 조례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에 동일·유사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은 57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첫째, 23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1개의 조례가 전면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12개 조례의 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21개의 조례는 제정 필요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검토된 경기도 조례는 다음과 같다.

[표 3-5] 경기도 조례 검토 결과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남북교류 협력에 가능성 낮음</li> <li>- 다만, 기획특구 관련 조례 제정 필요</li> </ul>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청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대학졸업생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의 실익이 낮음</li> <li>- 또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어 포괄적인 조례로 운영가능</li> </ul>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청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ul>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노동이사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하였음</li> <li>- 다만, 현 정부의 노사법치확립과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와는 차이가 있음</li> </ul>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17개 광역시 중 10곳, 226개 기초 중 17곳에서 조례 제정</li> <li>-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제정한 곳이 없음</li> <li>- 장기적 관점에서 제정 고려 필요</li> </ul>
경기도 공무원외출장 조례	도시브랜드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최근, 공무원의 국외 출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li> <li>-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절차 필요</li> </ul>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중복 가능</li> </ul>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기록물 관리는 강행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음</li> <li>- 고양시의 경우, 규칙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양을 빛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조례 필요</li> </ul>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위 조례와 같이 검토 필요</li> </ul>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근거규정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임</li> </ul>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자리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중대재해 처벌근거규정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임</li> </ul>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몇몇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li> </ul>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디민 법적근거가 없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략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관련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li> </ul>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략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고양시에 맞는 전략산업을 위한 관련 근거 조례 필요</li> <li>- 다만, 전략산업 또는 첨단산업 등의 명칭을 활용할 수 있음</li> </ul>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근거법에 강행규정성이 있음</li> <li>-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절차 필요</li> </ul>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현재,고양시 인구비율이 14.1%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한 준비가 필요함</li> </ul>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 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중장기적 예산현재,고양시 인구비율이 14.1%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한 준비가 필요함</li> </ul>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 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현재 자체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수행 중</li> <li>- 장기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전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아동 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고양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li> </ul>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후 에너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함</li> </ul>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ul>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마다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간 방향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부족함</li> <li>- 고양특례시 위상에 맞는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총괄감독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거리예술로 한정한 활성화 조례는 필요하지 않음</li> </ul>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코로나-19 등으로 예술인의 공연을 통한 예술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음</li> <li>-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강화하고, 거리 예술 등 다양한 부문의 예술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li> <li>- 다만,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문화, 고양을 위한 기본적 조례 필요</li> <li>- 수원, 용인, 성남의 경우,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있음</li> </ul>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별도로 지원 조례는 필요하지 않음</li> </ul>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문화도시 기본조례,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등에 포함</li> </ul>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방송통신 기반, 킨텍스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탁월한 입지를 보유</li> </ul>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AR/VR)기반의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li> </ul>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를 통하여 추진 가능</li> </ul>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근거법률인「관광진흥법」 제147조의3에 의거 장애인 여행기회 확대, 관광활동 장려지원 시책 필요</li> </ul>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중장기적으로 CJ아레나 등 고양 특구 사업으로 한류산업을 준비하는 조례 필요</li> </ul>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ul>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버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음</li> <li>-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필요</li> </ul>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대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사·도의 기능</li> <li>- 다만, 대규모 자연재난의 빈번한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전면개정 필요성 있음</b></li> <li>- 기존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 포괄적 내용인 '고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별도로 제정할 필요 없음</li> </ul>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별도로 제정할 필요 없음</li> </ul>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재난대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별도로 제정할 필요 없음</li> </ul>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건축 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영에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li> </ul>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건축 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 위한 기본 조례 필요</li> </ul>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유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지원 필요</li> <li>- 현재 모유수유실이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설치 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위생적등 관리 관리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li> </ul>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어르산·임산부 주차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어, 정부의 입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별도로 제정할 필요 없음</li> </ul>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유용미생물은 축산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li> <li>- 양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데 있어 조례 제정 필요</li> </ul>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연구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고양시 농산물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에서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 등 시민건강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li> </ul>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연구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고양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토지가 많지 않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어려움이 있음</li> </ul>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매년 쌀 경작면적과 소비량이 줄어 관련 조례 제정 불필요</li> </ul>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연구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없음</b></li> <li>- 현행대로 실시</li> </ul>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취소 사무가 이양된 후 검토 필요</li> </ul>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li>-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이양된 후 검토 필요</li> </ul>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중장기적 검토 필요</li> </ul>



경기도 조례명	관련부서	조례 제정 필요성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녹지과	- 위 사무들의 이양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 필요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례 제정 필요성 있음</b></li> <li>-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필요</li> </ul>



## 제 4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 제절 연구 결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례가 도출되었다.

[표 4-1] 경기도 조례 검토 결과

자치단체	검토 조례 수	검토결과
수원	189개	제정 필요 조례 : 13개
		제정 검토 필요 조례 : 19개
용인	133개	제정 필요 조례 : 10개
		제정 검토 필요 조례 : 14개
성남	187개	제정 필요 조례 : 6개
		제정 검토 필요 조례 : 11개
경기도	57개	제정 필요 조례 : 1개
		제정 검토 필요 조례 : 12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양시에 제정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다음과 같다.

- 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②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③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④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⑤ 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 제2절 정책 제언

### 1. 고양시 입법평가 조례 제정 필요

수원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향후 고양시 조례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표 4-2] 「고양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조항	내용
제1조(목적)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입법목적 달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항	내용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내용의 조례 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및 충돌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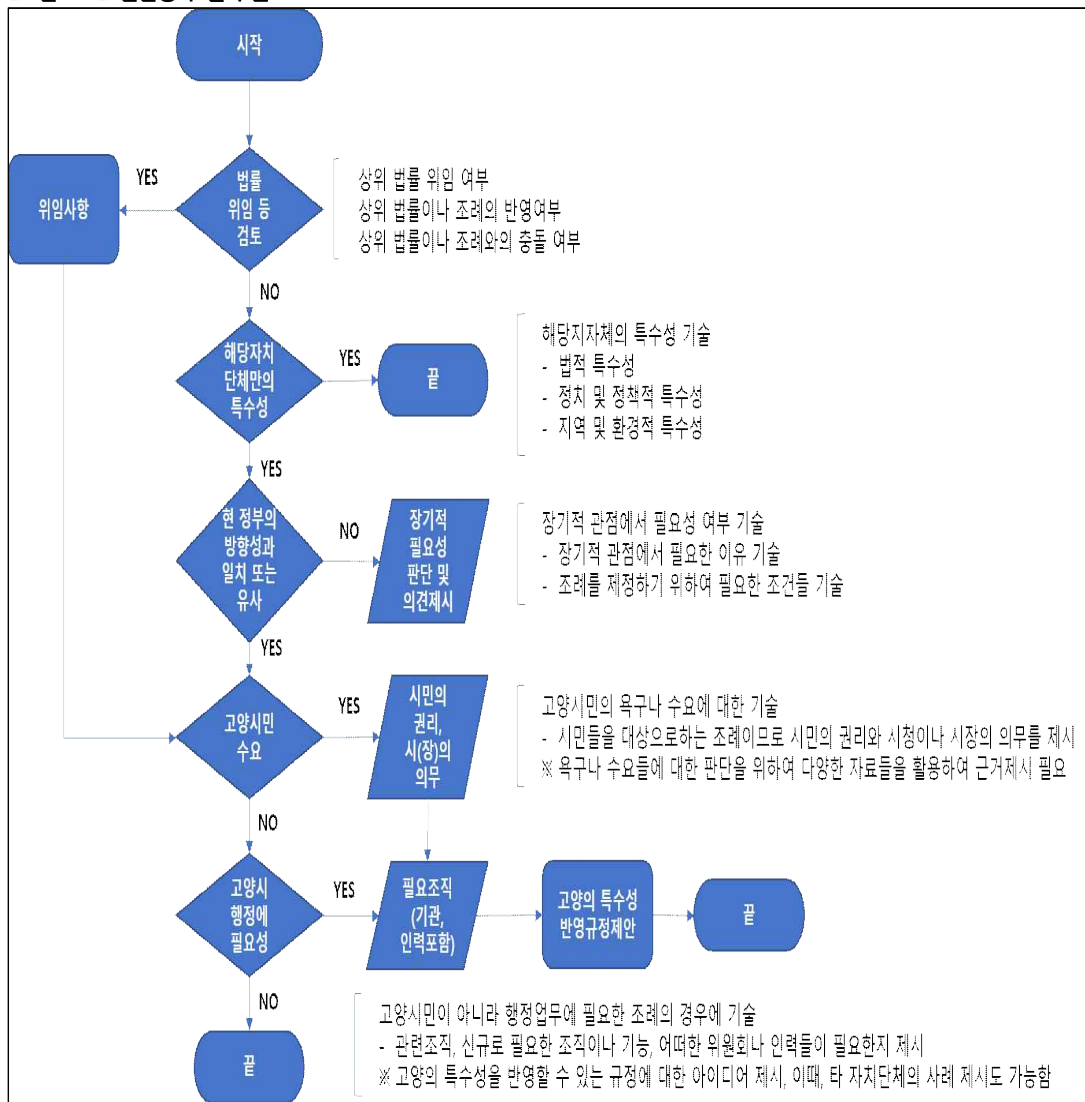
조항	내용
	②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p>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li> <li>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li> <li>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의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p>① 의회 의장은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통보받은 해당상임위 또는 집행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 고양시 입법평가 절차

고양시 입법 평가 절차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제안한다.

[그림 4-1] 입법평가 절차(안)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인석(2017).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입법평가연구』 제12호: 147-180.
- 김명용(201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제48권.
- 김태영(2017). “지방자치의 논리와 방향”.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경희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희진(202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분권레터』(2022년 6월 2일).
- 박윤흔(2001). 『행정법강의(하)』. (서울: 박영사).
- 법제처(2018).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안효섭(2014). “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법과 정책』 20(4): 239-263.
- 양태건(2019).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광윤(200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론의 문제점”. 『법제』 (2002.01).
- 이달곤(2004). 『지방정부론』. 박영사
- 이상훈(2005). “조례의 사법적 통제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Ⅰ), (Ⅱ)”. 『법제』 (2005.06).
- 정주영(2021).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세법학』 38호 : 131-173.
- 최윤철(2004).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제21집: 465-486.
- 최윤철(2005).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법제』 (2006.05).
- 행정안전부(2022). 자치법규업무매뉴얼(2022년판).
- 허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34호, 2020.
- 홍정선(2018). 『신지방자치법』. (서울: 박영사).

[해외문헌]

Y. Choi(2002)., Die Pflicht des Gesetzgebers zur Beseitigung von Gesetzesmngeln,  
Hamburg 2002.

[기타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https://esylaw.com/602>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Abstract

## Legislative measures for Goyang-si's policy ordinance following the launch of special cities

Hyongsung Kim\*, Sunghun Jeon\*\*, Howon Suk\*\*\*

In January 2022, the era of decentralization 2.0 officially began with the launch of special cities with populations over one million, such as Goyang, Suwon, Yongin, and Changwon.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tasks transferred to the special cities will gradually increase. However, many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in oth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 Province and special cities, but have not been reflected in Goyang C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roactive foundation for Goyang-style autonomous regulations by reflecting policy ordinances suitable for special cit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autonomous regulations with other special cities.

First, theoretical research looked at the following: First, the right to autonomous legislation. What is the right to autonomous legislation? It is the authority of a local autonomous body to establish regulations on autonomy for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based on the right to autonomy, and the right to enact ordinances and rules is it. However, the right to autonomous legislation is limited by the principle of legal conformity of administration and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law. Second, recentl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ies are enhancing the

---

\*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quality of legislation, secur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egislation, and strengthening the rationality and responsibility of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effects and impacts of legislative bills in advanc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ordinances of other special cities, large cities, and Gyeonggi Province, the ordinances that are commonly regulated i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ordinance on promoting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s, second, the ordinance on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third, the ordinance for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and promoting biodiversity, fourth, the ordinance on deleg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affairs, fifth, the ordinance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ity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 etc.

The policy sugges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uwon City, have already enacted and operated th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 and it is necessary for Goyang City to enact and operate th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legislative evaluation require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following: First, how to reflect the uniqueness of Goyang City? Second, does it match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Third, is there a demand or request from Goyang citizens?